



# 공공데이터 공유·활용 성공사례 입증...新산업 창출로 이어져야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 핵심으로 데이터가 부상했다. 데이터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경제 시대를 이끌 주요 산업 원료다. 양질의 데이터 확보와 공유, 활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정부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뉴딜 정책 주요 분야로 데이터를 꼽았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목표로 한다. 데이터 개방과 공유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데이터 관련 디지털 뉴딜 프로젝트를 준비한다.

◇코로나19 사태 속 빛난 데이터 공유·활용  
데이터 공유와 활용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주목받았다. 약국별 마스크 보유 현황을 알려주는 '마스크 앱'이 대표 사례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한국정보화진흥원(NIA),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와 국민안심병원, 선별진료소 데이터 등을 외부에 개방했다. 정부 주요 부처가 개방한 공공 데이터를 발판으로 민간에서 다양한 마스크 앱이 개발됐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부처마다 흩어진 데이터를 취합, 정제, 개방했다. 민간은 양질의 데이터를 단일 통로(공공데이터포털)로 빠르게 전달 받아 원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제작했다. 공공 데이터 개방과 활용 모범사례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사례가 됐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데이터 전문가 그룹과 우리나라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 현황을 공유했다.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핵심 과제로 데이터를 꼽은 이유도 이 같은 공유와 활용 성공 사례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안정적 데이터 공유와 활용이 민간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베스트 프랙티스(모범사례)를 확보했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지난해

세계가 주목한 '마스크 앱' 정부 부처마다 흩어진 데이터 취합 민간에 개방해 다양한 서비스 제공 데이터 산업 전반에 긍정적 영향

'디지털 뉴딜 2.0' 준비해야 데이터 기반 프로젝트 수요 맞춰 전문인력 확보·인프라 조성 필요 지역간 디지털 불균형 완화 속세

보다 두 배 많은 4만9000여개 공공데이터를 오픈해 개방한다고 밝혔다. 공공 데이터 개방을 가속화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업계도 정부 시기에 동의한다. 조광원 한국데이터산업협회장은 "최근 데이터3법 통과를 비롯해 코로나19 사태 속 공공데이터 활용 모범 사례가 늘어나면서 데이터 산업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한다"면서 "공공데이터 개방뿐 아니라 양질의 데이터가 개방돼 고품질 서비스로 연결되도록 정부 정책 밀착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 뉴딜 2.0시대까지 고민해야 시장조사 업체 한국IDC에 따르면 국내 빅데이터·분석 시장은 2023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11.2% 기록하며 2조5692억원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 빅데이터뿐 아니라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뉴딜 정책에 따라 데이터 기반 프로젝트도 다수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늘어나는 데이터 관련 프로젝트 수요에 맞는 인력 공급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발표한 '2019 데이터산업백서'에 따르면 향후 5년 내 전 산업의 데이터직무별 인력 부족률은 평균 16.1%다. 업계는 오픈 데이터산업 트렌드 첫 번째로 '데이터 전문 인력 확보 및 유지 어려움 가중'을 꼽았다. 조 회장은 "디지털 뉴딜 사업에 따라 데이터 관련 프로젝트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지만 업

계에서는 지금도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디지털 뉴딜 실질적 사업을 수행하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적절한 인력이 배치되고 채용될 수 있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프라 마련도 동반돼야 한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 공유하기 위해 시스템이 중요하다. 클라우드 시스템이나 데이터 거래스, 데이터센터 등 데이터 연관 인프라 조성도 필요하다. 단기적 일자리 창출을 넘어 중장기적 신산업 발전으로 고민이 이어져야 한다. 노규성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은 "데이터 인프라와 일자리를 만드는 디지털 뉴딜 1.0에서 시작해 나아가 이를 산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디지털 뉴딜 2.0으로 이어가야 데이터 기반으로 산업 전반이 고도화된다는"면서 "지역에 지역 데이터를 수집·관리하는 통합 데이터센터를 지자체 산하 기관으로 설립하고 지역별 데이터 융합단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노 회장은 "디지털경제 시대 경쟁력은 데이터 확보와 활용에 달려있다"면서 "지역 데이터센터와 융합단지 구축으로 지역 간 디지털 불균형도 완화하고 디지털 뉴딜 신산업도 열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데이터 구매문화 정착·기술 이해 뒷받침돼야

**정부 'AI 국가전략' 효과 거두려면 스타트업·중소 구매지원 정책 필요**  
**업계, 개방형 데이터 갈등 해소돼야**

인공지능(AI)은 디지털 뉴딜 핵심이다. AI는 금융, 의료, 에너지, 제조, 물류, 행정, 법률, 교통 등 산업 전반에 스며들면서 혁신을 가속화한다. 업무 생산성을 높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시장조사업체 IDC와 가트너에 따르면 세계 AI 시장은 2022년까지 1132억달러 규모로 커질 전망이다. AI 연관 시장으로는 2022년까지 3조 9230억달러 규모다. 2018년과 비교하면 각각 5.8배, 3.3배 확대된다. 정부는 'AI 국가전략'을 통해 AI 청사진을 제시했다. AI 인프라 확충을 위해 데이터 개방과 유통을 활성화한다. AI 인재 양성과 대형 AI 융합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 전략을 통해 2030년 455조원에 달하는 경제 효과를 거둘 것으로 바라본다.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로 AI 국가전략은 더 탄력받을 전망이다. AI 관련 정책과 프로젝트가 성과를 거두려면 데이터 구매 문화와 기술 이해 등 AI를 뒷받침하는 시스템 전반 변화가 필요하다. ◇AI 위한 데이터 구매 문화 정착해야 양질의 AI 서비스가 개발되기 위해 고품질 데이터가 확보돼야 한다. AI 서비스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정작 AI 기반을 이루는 데이터 구매는 주춤하는 기업이 많다. AI 스타트업 AI스페라를 공동 창업한 김휘강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AI 발전을 위한 양질의 데이터 수집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이 많지만, 이를 구매할 생각이 잘 하지 않는다"면서 "디지털 뉴딜 시대 AI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데이터를 구매해서 쓰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 데이터 바우처 사업을 비롯해 민간에서도 데이터를 구매하는 문화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기업에 비해 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데이터 구매 여력이 부족하다. 김 교수는 "디지털 뉴딜 시대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에만 수혜가 돌아가고 데이터 생산 주체가 이익을

보지 못하게 되면 산업이 성장할 수 없다"면서 "산업과 생태계 발전을 위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도 데이터 구매 노력을 확보하도록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I 기술 이해 뒷받침되는 정책 필요 디지털 뉴딜 시대에는 AI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계기로 정책 입안자를 비롯한 관계자가 AI 산업 전반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최대우 애자일소다 대표는 "국가 사업이 속도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AI 기술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우선돼야 한다"면서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가 있는지, 없다면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 알아야 하고 AI가 수식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내용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AI 업계에는 개방형 데이터 갈등도 존재한다. 최 대표는 "인간 오감에 해당하는 AI 엔진을 개발한다고 하면, 관련 데이터를 공공에서 모아 주면 좋을 것"이라면서 "데이터를 확보하고 양질의 데이터를 만드는 것 자체가 AI 기업 자산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품질 서비스 위한 인력수급 대비를"**

**조광원 한국데이터산업협회장**

"데이터를 수집·축적·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환영한다. 우리나라 국가 전반에 흩어진 다양한 데이터 품질 수준을 끌어올리고 고급 데이터로 축적, 이를 인공지능(AI) 서비스에 활용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조광원 한국데이터산업협회장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에 데이터가 중요한 분야로 꼽힌 점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조 회장은 "과거 종이 문서를 디지털화하는데 많은 인력을 투입했던 것처럼 AI 머신러닝을 위한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에도 많은 인력이 동원될 것"이라면서 "이들이 데이터 품질을 높여야 AI 서비스 품질도 높아지고 고품질 AI 서비스나 데이터 연관 서비스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강조한 데이터 수집·축적 과정에는 초·중급 인력이 중요하다. 현재 데이터 업계

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 데이터3법 통과 후 관련 인력 수요는 더 급증해 인력 부족 문제는 계속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초·중급 인력 수급을 위해 경력단절 인력이야 은퇴 개발자 등 기존 인력 활용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조 회장은 "데이터3법 통과 후 가장 필요한 인력이 데이터 비식별화, 가명정보와 관련 분야"라면서 "이 역시 초·중급 인력이 대거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분야 인력은 계속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회장은 "초·중급 인력은 6개월~1년가량 교육 받거나 기존 경력단절, 은퇴 인력을 활용해 클라우드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면서 "이 인력을 투입하기 위해 원격지 개발, 재택근무 등 언택트(비대면)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지선기자